

사회서비스 일자리의 새로운 대안 : 사회적 경제

강현주*

Summary

□ 사회서비스 일자리의 현황

- 사회서비스 분야의 일자리 창출효과 크나, 지출규모나 평균고용률은 낮음.
- 향후 재정지출, 인력수요 등 지속적인 확대가 전망되나 이용자에 저급한 서비스, 공급자에 저급한 일자리 제공이 여전히 문제

□ 사회서비스 공급주체로서 사회적 경제조직의 가능성

- 사회적기업, 사회적협동조합, 마을기업 등 사회적 경제조직은 사회서비스 일자리의 양과 질 문제 동시 해결의 대안
- 시장경제의 한계 극복 → ‘사회적’ 서비스로서의 공공성, 형평성, 사회통합 달성에 기여. 지역밀착형 서비스가 강조되는 사회서비스 목적과도 부합됨.
- 경기도 사회적 경제조직은 전국의 15.2%에 불과, 전체 조직유형 중 사회서비스 제공형의 비율은 6.3%로 매우 낮음.

□ 정책적 제언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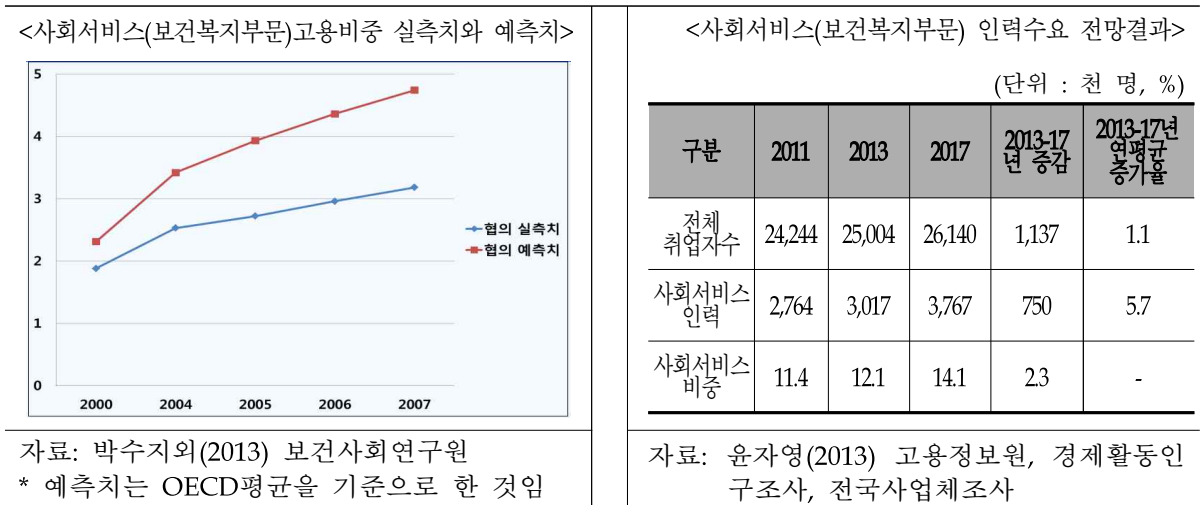
- 사회서비스 이용자 선정기준 완화 → 총수요·공급확대 → 사회적 경제도 확대
- 사회적 경제조직은 아직 성장 초보단계 → 민간 자생조직 성장을 위한 생태환경 조성 및 지원
- 지역연계 강화, 사회적 경제조직 간 네트워킹 활성화
- 경기도 복지정책과 사회서비스업무와 경제투자실 일자리정책과 일자리 업무를 통합·관리할 T/F팀 운영, 기존의 사회적 경제 지원기관 확대·강화 운영

* 경기복지재단 책임연구원/hyunju09223@ggwf.or.kr/031-267-9319

1. 검토배경 및 쟁점

□ 사회서비스 분야 일자리 창출효과와 잠재력

- ‘고용 없는 성장’ 시대 사회서비스 사업은 일자리 창출의 블루오션으로 등장
- 그러나 한국의 GDP대비 사회서비스 지출, 사회서비스의 고용비중은 아직 OECD 평균(예측치)에 비해 매우 낮고, 실측치와의 차이가 점점 커지고 있음.
- 사회서비스 재정지출, 일자리 창출의 가능성 꾸준히 상승할 것으로 전망.
 - 고용정보원(2013) 사회서비스업 인력수요 전망에서 2013- 2017년 동안 75만 명의 추가 인력수요 발생, 전체 취업자 수 증가의 66% 차지할 것으로 전망



□ 이용자에 저급한 서비스, 공급자에 저급한 일자리

- 공급자 중심의 역선택, 각종 부정 등으로 이용자에 질 낮은 서비스 제공
- 일자리 측면에서도 고졸, 중장년층 여성에 집중. 노동의 부가가치 생산성이 낮고 근로조건이 열악하며 고용이 불안정한 저급한 일자리 창출

□ 일자리 양(量)과 질(質)을 동시에 해결할 방안 필요

- 장기적 성과를 위해 일자리 양의 확대와 함께 안정적 서비스를 제공하고, 지속가능한 일자리로 전환하도록 서비스 공급체계의 재구조화 필요.
- 경기도는 1,255만 명이 거주. 인구 전국 최대, 사회서비스 수요도 전국 최대. 고령, 장애, 보육, 활동제한 인구 등 유형별 사회복지 수요계층도 매우 크고 다양함. 국가적 관점에서 사회서비스 산업의 선도적 역할 요구됨.

2. 대안으로서의 사회적 경제조직

□ 사회적 경제조직을 통한 사회서비스 공급의 가능성과 장점

- 민간시장 공급체계의 한계 극복
 - 시장경제조직 : 이윤극대화 목표, 과잉경쟁 → 일자리 양은 확대 되나 일자리 질 저하
 - 사회적 경제조직 : 사회적 목적 추구, 참여 통해 종사자 직무만족도 높임, 공급자와 수요자간 신뢰 확보 → 일자리 양은 물론 일자리 질 향상
- ‘사회적’ 서비스로서 사회서비스 목적(공익성, 형평성, 사회통합) 달성에 기여, 재분배, 민관파트너십 강화를 통한 민간역할 활성화에도 기여
- 지역 주민 간 협력과 네트워킹이 강조되는 사회적 경제조직은 지역밀착형 서비스가 강조되는 사회서비스의 특성과 부합됨.

3. 경기도 사회적 경제조직 현황 및 변화

□ 도내 사회적 경제조직 현황

- 경기도 사회적 경제조직은 전체 1,042개, 전국의 15.2% 차지. 서울 21.1%보다 낮고 특히 사회적 기업 비중은 전국 대비 16.2%로 서울 20.4% 보다 낮음.

<표-1> 전국, 서울, 경기 사회적 경제 조직현황 비교

(단위 : 개소)

구분	계	협동조합		사회적기업	예비사회적기업	마을기업
		사회적협동조합	일반협동조합			
경기	1,042	43	459	171	215	160
서울	1,437	46	967	215	98	111
전국	6,820	111	3,210	1,052	1,328	1,119

※ 자료: 협동조합(기획재정부 협동조합 홈페이지, <http://www.cooperatives.go.kr/>(2013. 12))
 사회적기업(사회적기업진흥원 자료(2013. 12)/마을기업(안전행정부 내부자료 (2013.12))

- 사회서비스제공형 사회적 기업의 비중이 매우 낮음
 - 사회적 기업을 목적 실현 유형별로 5가지로 구분(일자리제공형, 사회서비

스제공형, 혼합형, 기타형, 지역사회공헌형)했을 때 전체적으로 일자리제공형이 절반 이상이며, 사회서비스제공형은 매우 적은 비중(5.8%)을 차지함.

<표-2> 사회적 목적 실현 유형별 사회적 기업 인증현황

구분	일자리 제공형	사회서비스 제공형	혼합형	기타형	지역사회 공헌형	총합계
경기	116 (67.3%)	10개 (5.8%)	19개 (11.1%)	26개 (15.2%)	0개 (0%)	171개
서울	109 (51.4%)	19 (8.9%)	29 (13.6%)	55 (25.9%)	0 (0%)	212개
전국	697개 (66.2%)	61개 (5.7%)	150개 (14.2%)	133개 (12.6%)	11개 (1.0%)	1,052개

※자료: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, 서울,경기 사회적기업 통합지원기관 내부자료(2013.12.31.기준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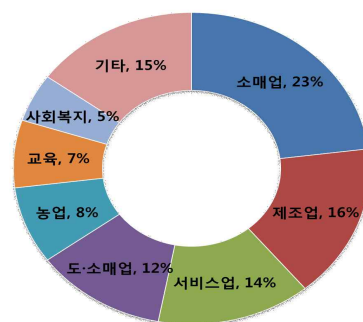
□ 사회적 경제조직 변화

- 2007년 이후 5년 사이 경기도내 인증 사회적 기업 수는 13배 이상 늘어남. 경기도 협동조합의 수는 2013년 8월 기준 317개(전국의 13%)로 연초 대비 10.56% 증가.
- 그러나 사회적 기업 중 취약계층의 사회서비스 혜택과 일자리를 동시에 해결하는 사회서비스제공형의 비중이 가장 낮으며, 사회적 협동조합에서도 업종별로 보면 소매업 72(23%), 제조업 50(16%), 서비스44(14%)에 비해 사회복지분야는 5%에도 미치지 못함. 아직 사회(복지)서비스 분야에 대한 협동조합의 관심이 크지 않음을 의미함.

[그림1] 사회적 협동조합 증가추이



[그림2] 업종별 분포현황



자료: 경기도 경제정책과 (2013.9.9)

4. 정책제언

□ 첫째, 사회서비스의 확대 및 보편화 실현

- 이용대상자 선정기준 완화 → 사회적 경제조직의 진입 유도
 - 사회서비스를 저소득층 위주사업으로 인식함은 사회적 경제조직 매출저하의 원인이 됨. 이용 대상자 선정기준을 완화하여 총수요, 총공급을 확대해야 함.

□ 둘째, 사회적 경제조직의 사회서비스 공급기관화 유도

- 사회적 경제조직의 일자리 질, 종사자 만족도가 타 기관에 비해 높음
- 조직유형별 특성, 장점을 고려하여 지역특성에 맞는 사회적 경제조직을 사회서비스 공급기관으로 유도
 - 경기 북부, 농촌지역은 지역연계 성격 강한 협동조합, 마을기업 적합
- 사회적 경제 조직에 대한 직·간접적 지원 및 생태환경 조성 필요
 - 사회적 협동조합의 진입장벽을 낮추기 위해 신고제로 전환 필요
 - bottom-up 방식의 자생적 사회적 경제조직 형성 유도

□ 셋째, 지역사회와의 연계강화와 조직 간 네트워크 활성화

- 사회적 경제조직 간 협력체계 구축, 연합회, 협회 간 네트워킹 활성화

□ 넷째, 경기도 사회적 경제, 사회서비스 통합 T/F 팀 운영

- 사회적 경제 업무의 지방위임 확대. 지방정부의 적극적 역할 요구
- 경기도 사회적 경제 업무는 경제정책과에서 사회서비스 업무는 복지정책과에서 담당. 책임소재 불분명, 정책혼선 발생. 사회적 경제조직과 사회서비스 일자리 업무담당 T/F 팀으로 일원화하여 추진해야 함.
- 기존의 사회적 경제 지원기관의 기능을 확대·강화하여 운영해야 함.

G-Welfare Focus(GWF)는 주요 정책고객 및 정책결정자를 대상으로 경기도 복지와 관련된 환경변화와 주요 이슈를 분석하여 파급효과 및 대응방향을 제언하는 비정기적 발간물입니다.